

호르무즈·대만해협 ‘동시 경고음’… 여야 “선제 대응해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신중론’
범정부 차원 대비 태세 점검 요청

여야 의원들이 10일 대정부질문에서 대만해협과 호르무즈해협 등 유사시 대한민국 경제·안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와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국제 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대만해협에서 갈등이 분쟁으로 번질 경우를 대비해 민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우리 정부와 군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가격 급등 등에 대비해 일본 등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파병 요청에 우리 군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조사단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30%, 액화 천연가스(LNG)의 약 20%가 통과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요충지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의 후폭풍으로 두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박준주 외교부 제1차관에게 “(우리 군의) 2003년 이라크 전쟁 파병 때와 호르무즈 파병이 무엇이 같고 다른가”라고 물었다. 박 차관은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공급망과 많이 관련돼 있고 선박의 안전, 영내 지역에 있는 분의 안전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전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아닌가”라며 “(파병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 확산이 몰고 올 에너지 가격 급등에 정부가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 의원은 “중

동이 어려워지면, (에너지의) 60%가 중동에서 오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는 국가적 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도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에너지 비상 플랜이 있나”라고 물었다. 박 차관은 “에너지 관련 대체수급선 확보, 국가 상호 간 비축 및 교환 등을 협의해나가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외교부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에너지 위기 상황 때 이웃 국가인 일본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일본과는) 에너지 비축과 교환, 공급 및 확보 문제를 두 가지 트랙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공급망 관련해서 협의 어레인지먼트(협의)를 갖고 있고, 일본의 경산성과 우리의 산자부 간 에너지 비축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과 교환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매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 전략이 될 것”이라며 “각별히 지혜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차관은 국내법 절차와 사회적 동의를 토대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예로 들며 중국과 대만 사이 대만해협이 봉쇄될 경우 우리나라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미국이 개입해서 전쟁이 발발해 대만해협이 봉쇄되면 우리 경제에 훨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3% 이상 줄어들고 주한미군이 이동

하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어서 안보 상 큰 위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과거 이 대통령은 대만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왜 개입하냐, 전쟁이 발발해도 남의 나라 일’이라며 중국에도 세세(Xiexie·감사합니다), 대만에도 세세하면 된다고 했다”며 “이게 세세하면 해결될 일인가. 저는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외교적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의 잘못된 세세 인식을 바로잡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대만 통일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며 “사태가 발생하고 대응하면 늦는다. 지금이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보탰다.

이에 한 총리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가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외교적 상황이 있다는 부분들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관계를 예민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님이 주신 말씀 잘 새겨서 대만과 중국 간의 부분들을 잘 살피겠다”고 했다.

/박태홍·박경수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프랑스와 K-콘텐츠·원전·AI 협력 ‘성과’ 여야, 용혜인 청문회 증인 채택부터 충돌

국방·원전 등 16건 협력 문서 채택
‘뤼미에르 파트너십’ 등 외연 넓혀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순방을 통해 문화·영상 산업 글로벌 연대를 주도했으며, 한국과 프랑스 사이 안보·원자력·첨단산업 등 협력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7분쯤 공군 1호기 편으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에 도착해 이튿날인 7일 생폴 드방스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했다. 뤼미에르 서밋에서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을 맡아 영화·영상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밋의 참석 성과로는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인 ‘뤼미에르 파트너십’ 출범이 있다. 한국과 프랑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각각 5억유로(약 8000억원)씩 총 10억유로(1억6000억원)를 영화·영상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자국 콘텐츠 기업 지원과 양국 공동 제작 활성화,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확대 등이 출범 취지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서밋을 계기로 국내의 영상산업 관계자들과 잇달아 만나 투자와 제작, 유통 전반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뤼미에르 서밋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8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서 양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정상은 문화 분야뿐 아니라 국방·방산과 원자력, AI, 반도체, 양자기술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 분야를 포함해 총 16건의 MOU(양해각서) 등 협력 문서를 채택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해 정보 교류의 안정성을 높였고,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 출범에 합의하고 장기 농축염류 공급 협력 의향서를 채택해 원전 공급망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원전 수출 시장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양국이 공급망과 기술 분야에서는 상호 보완적 협력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또 삼성전자와 프랑스 AI 스타트업인 미스트랄AI 간 투자협약도 체결하는 등 반도체·양자기술·우주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하기

로 했다.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긴밀한 공조 및 실질적 기여에 대해서도 양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다. 한국과 프랑스가 에너지 수입과 수출 물류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지역 안정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한 것이다.

다만 양 정상은 ‘파병’이 아니라 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에 대해 “호르무즈 파병이 의제는 아니었다”며 “우리의 검토 단계에 맞춰 해협의 안전 및 통항 문제에 대한 기여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익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기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與 “독단 취소” vs 野 “27명 거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정하기 위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로 무산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 소속인 이수진·이연희·전은수·김남균·이주희·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손슬 진보당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정됐던 성평등가족위 전체회의가 위원장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됐다”며 “용혜인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 채택이 예정돼 있던 회의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돼, 이후 청문회 일정을 두고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인내심을 갖고 협의했다”며 “어제부터 증·참고인 채택을 두고 간사 간의 협의를 이어왔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입맛대로 청문회 일정이 협의되지 않고 증·참고인 협의가 안되니 국민의힘과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관련해 국민의힘은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해왔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다.

반면, 성평등가족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역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파행의 책임은 오로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종 의혹 해소와 검증에 필요

한 증인 채택을 위해 국민의힘은 28명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1명을 제외하고 27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과 청문회 일정을 조율했지만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청문회 개최 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외에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 등 28명을 증인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미정 전 기본소득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제외한 27명의 채택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후보자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각종 의혹을 규명할 수 없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자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 후보자를 둘러싼 위성정당을 통한 두 차례 비례대표 당선과 장관직 겸직·국고보조금 문제, 정치자금 약 3억원의 특별당비 납부, 당내 성차별 묵인 및 세월호 침묵시위 차명기획 논란, 배우자 박기홍 최고위원의 ‘셀프 인사’ 및 ‘가족 소득당’ 논란, 김포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논란,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및 시·도당 사무소 허위등록 의혹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용혜인 후보자는 이날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관·비례대표 의원 겸직, 사당화·가족정당 의혹 등을 스스로 해명하며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박태홍 기자